2024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반의 구성 ·····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 8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 12

2) 고용노동부 소관 ····· 22

3) 기상청 소관 ····· 35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 37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38

2) 고용노동부 소관 ····· 98

3) 기상청 소관 ····· 174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 180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24. 10. 7(월) ~ 10. 25(금) [1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기관 : 총 74개 기관	
1. 환 경 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생물자원관 (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5) 화학물질안전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9) 한강유역환경청 (10) 낙동강유역환경청 (11) 금강유역환경청 (12) 영산강유역환경청 (13) 수도권대기환경청 (14) 원주지방환경청 (15) 대구지방환경청 (16) 전북지방환경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APEC 기후센터 (3)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3. 고용노동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2) 최저임금위원회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7) 한강홍수통제소
(18) 낙동강홍수통제소
(19) 금강홍수통제소
(20) 영산강홍수통제소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국립공원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국립생태원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8) 한국상하수도협회
(9) 한국환경보전원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수치모델링센터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3) 수도권기상청
(4) 부산지방기상청
(5) 광주지방기상청
(6) 강원지방기상청
(7) 대전지방기상청
(8) 대구지방기상청
(9) 제주지방기상청
(10) 국가기상위성센터
(11) 기상레이더센터
(12) 국립기상과학원
(13) 항공기상청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고용정보원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 노사발전재단
(9) 건설근로자공제회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 한국잡월드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감사반의 편성

가. 편성원칙

감사반의 편성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16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나. 감사반

감사반장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감사반원	김주영 위원 강득구 위원 김태선 위원 박 정 위원 박해철 위원 박홍배 위원 이용우 위원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위원 김소희 위원 김위상 위원 우재준 위원 임이자 위원 조지연 위원	국민의힘
	정혜경 위원	비교섭단체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8일(화)	10:00	환경부	국회	
10월 9일(수)		공휴일(한글날)		
10월 10일(목)	10:00	고용노동부	국회	
10월 11일(금)	10:00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회	
	오후	현장시찰	기상청 서울청사	출장
10월 12일(토)~13일(일)		휴일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14일(월)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북지방 환경청 (전북 전주)	현장국감
	오후	현장시찰	새만금	출장
10월 15일(화)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6일(수)		자료정리		
10월 17일(목)	10:0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회	
10월 18일(금)	14:00	현장시찰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 안동댐 등 (경북 안동)	출장
10월 19일(토)~20일(일)		휴일		
10월 21일(월)		자료정리		
10월 22일(화)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0월 23일(수)		자료정리		
10월 24일(목)	10:00	환경부 기상청	국회	종합감사
10월 25일(금)	10:00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종합감사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5	9	14
출 석	4	9	13
불 출 석	1	·	1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14	6	20
출 석	10	6	16
불 출 석	4	·	4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2024. 10. 8. 환경부 본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3명)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전주리사이클링센터 운영 공동수급체 대표기업. 타지역 음폐수 유입 등	
	장형진	영풍 고문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 입장 확인	X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참고인 (2명)	남준희	기업인 (폐차장업)	미흡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제고 방안	
	진현철	전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	석포제련소 중대재해 및 백혈병 산재 미승인	

■ 2024. 10. 10. 고용노동부 본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3명)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 사망 등 산재 노동탄압, 열악한 노동조건 관련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 사망 등 산재 노동탄압, 열악한 노동조건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티메프 사태 관련	X

■ 2024. 10. 15.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4명)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발생하는 중대재해 관련 신문 /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확인	
	이상균	HD현대 대표이사 사장	조선소 노동자 사망 등 산재 및 노동환경 처우 문제 등	
	최재호	유진기업 부사장	2022년 노조 설립 후 현재까지 기본협약 미체결. 부당노동, 부당해고 등 노동3권 침해 심각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참고인 (3명)	강용석	대유위니아 노조위원장	위니아그룹의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 미해결 상태. 변제계획안 미제출 및 위증죄 문제 지적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	임금체불 관련	
	하니 팜 (뉴진스)	아이돌 가수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관련	

■ 2024. 10. 17. 환경부 산하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 자진출석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시멘트회사의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 문제	

■ 2024. 10. 2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산업재해 발생 문제	

■ 2024. 10. 24. 환경부 및 기상청(종합감사)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명)	장형진	영풍 고문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 방안 입장 확인	
참고인 (7명)	백경오	한경대 교수	기후대응댐 건설 관련 문제점	
	김명숙	지천생태모임 대표	기후대응댐 건설 관련 문제점	
	도희섭	예천군 용두리 주민	예천군 기후대응댐 관련	
	이동현	주부	아기 기후소송단 헌법소원, 기후위기 심각성 관련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아기 기후소송단 헌법소원, 기후위기 심각성 관련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GHP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제조사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 예산낭비행위 문제점	

■ 2024. 10. 25.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종합감사)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6명)	오요안	한국닛또덴꼬 (주)대표이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 철수 과정 노동자 해고 문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	업계 포괄임금제로 인한 IT업계 장시간노동 문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티메프 사태 관련	X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X
	박순관	아리셀 대표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X
참고인 (3명)	정화인	웹툰 작가	웹툰 작가 고강도 노동 제한을 위한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입장 청취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실태 관련 의견 청취	
	김순옥	가전통신노조 코디코닥지회장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현황 파악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정책 퇴보문제 개선 필요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필요 (3) 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위탁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산하기관 수의계약 전수조사 필요 (5)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산하기관 관리체계 점검 필요 (6) 전임 감사관의 도덕적 해이 관련 개선방안 요구 (7) 용담댐 피해주민 보상의 시급한 해결 필요 (8) 환경부 연구비 지원 사업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점검 필요 (9) 수자원공사 외부 인사 채용에 관한 진상조사 필요 【녹색전환 부문】 (1)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녹색기업 지정제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자연보전 부문】 (1) 곰 사육 종식에 따른 사육곰 보호 방안 마련 및 민간협력 강화 필요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물 · 가공품 거래 관련 사후관리 철저 (3) 제주 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 부실검토전문위원회 회부 필요 (4) 전북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필요 (5)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6) 동물 체험의 예외 조항을 규정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적절성 검토 필요 (7) 생태자연도 1등급지 보전 대책 마련 필요 (8)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사업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9)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사업 의혹 해명 필요 **【자원순환 부문】** (1)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확대 및 정책 방향성 명확화 필요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피해 보상 방안 마련 필요 (4)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지연으로 인한 감사원 고발 및 징계 필요 (5) 멸균팩 재활용 용이성 표기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6) 재활용 방법별 물량에 대한 통계 작성 필요 (7)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8)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9)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및 단속에 대한 점검 필요 (10) 종이 빨대 관련 연구용역의 추진 및 정책 재검토 필요 (11)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2)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관련 대책 마련 필요 (13) 민간 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필요 (14) 팝업스토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 필요 (15)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준비 철저 필요 (16) 시멘트의 6가크롬 함유량 관련 유해성 기준 마련 필요 (17) 시멘트업계의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개선 필요 (18) 의류 재고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9) 플라스틱 재질별 통계 구축 필요 (20)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21)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22)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선별분류 작업환경 개선 필요 (23)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화 캠페인 실시 필요 (24) 방치폐기물 처리 지연과 부족한 비용 회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5) PVC 포장재 사용 전면 금지 등 대책 마련 필요 **【물관리 부문】** (1) 기후위기 댐 건설 필요 (2) 기후위기 댐 관련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요 (3) 보 및 댐 철거 방안 등 검토 필요 (4) 낙동강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 (5) 녹조 독소의 유해성에 대한 공동조사 방안 마련 필요 (6) 녹조 제거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7) 유역 중심의 통합적 물관리 방안 마련 필요 (8) 새만금 지역 수질개선 대책 등 방안 마련 필요 (9) 이차전지 폐수처리 방류 기준 마련 필요 (10) 조류독소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필요 (11)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의 신속한 집행 필요 (12) 석포제련소 이전 방안 검토 필요 (13) 상수원보호구역에 떨어지는 오물 풍선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리 필요 (14)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15) 콘크리트댐 노후화에 대한 하자보수 개선 제도 마련 필요 (16)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 홍보 필요 (17)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점검 강화 필요 (18)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19) 군 부대 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0) 금강·영산강 보에 대한 원리적 관리 및 생태계 보존 중심의

주요 감사 실시내용
물관리 정책 추진 필요 (21) 하천점용허가 절차 개선방안 검토 필요 (22) 도산대교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 **【기후 부문】** (1)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부 역할 확대 필요 (2) 면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필요 (3) NDC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 관리 철저 필요 (4) NDC 수송분야 관련 차량 배출량 기준 설정 조정 필요 (5)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공개 필요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필요 (7) 대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8)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 필요 (9)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필요 (10)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배출권거래 시장 제도 개선 필요 (11)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 필요 (12) 제철소 고로 개보수 작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필요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4) 기후변화와 작물별 재배지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5) 2050 장기감축경로 마련 미래 전략 포럼 구성원에 청년, 노동자 등 포함 필요 (16) 지구대기측정망 부실 운영 관련 **【환경보건 부문】** (1) 석면해체 현장에 대한 감리 부실 관련 제도개선 필요 (2) 유해화학물질 포함 제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사업 사후조치 개선방안 마련 필요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강화 필요 (6)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7)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 (8) 정유화학업체에 대한 특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대비 시스템 마련 필요 (9)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 마련 필요 **【대기보전 부문】** (1) 노후 전기차 조기폐차 등 전기차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 사업의 재검토 필요 (3) 응축성 미세먼지의 배출량 산정 및 관리 대책 마련 필요 (4)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관리 방안 개선 필요 (5)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 허위 측정 문제 개선 필요 (6) 지하철 소음관리 강화 필요 (7)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수수료 산정 기준 및 검사 주체 재검토 필요 (8) 조기폐차된 노후 경유차 재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재검토 및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10) 지역별 매연저감장치 부착률 제고 방안 마련 (11) 요소수 에뮬레이터 유통·구입 금지 필요 (12)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사업자 선정시 로밍 비용 고려 필요 (13) 미등록·미인증 전기차 충전시설에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대책 마련 필요 (14) 가스열펌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관련 사후관리 대책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소속 · 산하기관 공통사항】

(1)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점검 전문업체에 위탁 필요
(2)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체계 개선 및 여성 배려 필요
(3) 성과급 및 급여 지급 지침 준수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절차 등 문제점 개선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

(1) PFOA에 대한 먹는 물 검사기준 강화 등 규제 방안 마련 필요
(2) 이차전지 폐수처리 항목 · 기준 재검토 및 처리 방안 마련 필요
(3) 미세플라스틱 측정 방법 고도화 예산 확보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 ◀

(1) 야생동물 백색목록 지정 기준에 동물복지 기준 포함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

(1) 잔여 화학물질 보관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 필요
(2) 화학사고 예방교육의 고도화 필요
(3)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관리 제도 강화 필요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대상 확대 및 분석 방법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금호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진행 중지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검토 필요
(2) 위법한 행위를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3) 허가 범위 이상의 대흥란 개체 채취에 대한 처리 필요
(4)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필요
(5) 녹조예방 예산의 불용 원인 파악 및 예산 확보 필요
(6) 조류경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녹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7) 낙동강 상류 지역에 녹조 대응 연구센터 설치 필요
(8)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인근 주민 건강대책 수립 및 주민 의견 수렴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 ◀

(1) 홍수관리 구역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한 개별 통지 방안 마련 필요
(2)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한 공주보 담수 행위 금지 필요
(3) 양촌산업단지 화력공장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필요

▶ 대구지방환경청 ◀

(1) 왕피천 계곡 환경감시원 제도 재개를 위한 노력 필요
(2) 하천·댐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3) 대구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 노력 필요
(4)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사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
(5) 낙동강 상류 축산단지의 국가 매입 필요
(6)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사후감독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국수자원공사◀ (1) 기후대응댐 관련 수자원공사의 역할 수행 필요 (2) 안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 확보 정책 추진 필요 (3)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실효성에 대한 실증 필요 (4) 국제테마파크 용지 저가 매각 관련 고발 필요 (5)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오염 문제 및 부채 상환 근거 미비 해소 필요 (6)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등 취수원 다변화 정책 필요 (7) 식수 안전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보 필요 (8) 통합적인 물관리 방안 마련 필요 (9) 하천 쓰레기에 대하여 공조 체제 유지 필요 (10) 조직 기강 확립 및 관리 노력 필요 (11) 성비위 문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2) 병물 폐기량 저감 대책 마련 필요 (13) 노후 풍력발전소 수리 대책 마련 필요 (14) 청결지킴이의 철저한 안전교육 필요 (15) 아라뱃길 운영의 시민 여가·친수 문화 중심으로 전환 필요 (16) 댐 안전 우려 해소 필요 (17) 안전사고 발생 관련 공사의 대책 마련 필요 (18) 개발이익과 민간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 필요 (19) 시화지구에서 추진된 사업에 대한 논의 및 검증 필요 (20)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 (21)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한 생태계 파괴 및 특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2) 내수면어업권 회수에 따른 어민 생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3) 인사특혜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이나 환경부 등 감사 청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국환경공단 ◀

(1) 지구대기측정망 자료의 신뢰성 제고 필요 및 부정확한 측정값 발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2) 폐배터리 회수율 제고 및 보관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의류 재고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4) 전기차 충전기의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5)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6)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보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립공원공단 ◀

(1) 지리산 산악열차 개발 관련 입장 표명 필요
(2) 소나무재선충 방제 업무 이관 방안 검토 필요
(3) 산양 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탐방객을 위한 국립공원 경관 조성 노력 필요
(5)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필요
(6) 국립공원공단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관리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7) 정규직과 공무직 간의 임금 차별 문제 해소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그린에너지개발과의 수의계약 문제 대책 마련 및 감사원 감사 필요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의 공정성 강화 및 부당이득 전수조사 필요
(3) 기반사업부담금의 목적 외 사용 문제 해소 필요
(4) 공사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다각화 등 방안 마련 필요
(5) 침출수 처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업체 내정 의혹 해소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6) 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 조치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위해성 생활화학제품 유통 문제 시정 필요 (2)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4) 미용접착제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5) R&D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6) 비위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국립생태원 ◀** (1) 정보관리 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 (2) 고리도롱뇽 집단폐사 사건 관련 생태원의 역할 수행 필요 (3)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1) 업무추진비 허위보고 및 부정집행 시정 필요

2)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 · 인사 · 재무 등 일반사항】 (1) 쿠팡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2)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필요 (3) 기획재정부와의 상호 대등한 인사 교류 필요 (4) 민원인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5) 실장 직위에 여성 임명 필요 (6)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예산 현실화 필요 (7)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포상 필요 (8) 고용노동부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분 필요 (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인사 편중 문제 해결 필요 (10) 노동자의 시각을 고려한 업무 추진 필요 (11) 한국폴리텍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조치 필요 (12) 같은 사안에 대한 중노위와 노동청의 결정이 다른 문제 해결 필요 【고용 부문】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속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설치 등 필요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모색 필요 (3) 공정한 채용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필요 (4)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6) 공무직근로자 고용연장 관련 기준 및 대안 마련 필요 (7) 실업급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 필요 (8)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9)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구별하여 부정수급을 감독할 필요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필요 (11)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마련 필요 (13)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등 (14)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신속한 이민청 설립 방안 마련 필요 (15)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자로의 전환 방안 모색 필요 (16)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 개선 및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등 (17)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18)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미활용 업종에 대한 검토 필요 (19)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 강화 필요 (20) 고용보험기금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충 필요 **【노동 부문】** (1)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수사 필요 (2) 쿠팡 클렌징 제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3) 쿠팡 취업규칙 변경 부실 심사 확인 및 조치 필요 (4)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필요 (5)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주요 감사 실시내용
대책 마련 필요 (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필요 (7)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190호 협약 비준 등 필요 (8) 대지급금 회수 절차 국세체납절차로의 전환 필요 (9) 포괄임금 오남용 규제 방안 마련 필요 (10)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지침 개정 필요 (11)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체계 편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1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필요 (13)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적립의무 불이행 방지 필요 (14)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불법파견 실태조사 실시 필요 (15)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16)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강구 필요 (17)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18)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 필요 (19)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 (20)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개선계획 및 전담부서 마련 필요 (21) 각 지방청 및 지청 소속 권리구제지원 노무사 처우 현실화 필요 (2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23)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의 다양한 구성 필요 (24)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 필요 (25) 시정지시 관련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6)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지원 필요 (27) 하이브-뉴진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8) 근로감독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29)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 (30)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31)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32) 이음센터 예산 확대 전면 재검토 필요
(33)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독려 필요
(3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균형적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필요
(36)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37) 공무직근로자 및 자회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38)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39)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성과 홍보 필요
(40) 가맹점 사업주가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 마련 필요
(41)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등을 담은 지침 마련 필요
(42) 업종별 근로시간 차등화 · 유연화 방안 검토 필요
(43)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 필요
(44) IT · 게임 산업의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45) 근로감독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6)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47) 정부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참여 보장 필요
(48) 가짜 3.3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49)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50)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할 필요
(51) 건설업 일자리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52) 원·하청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필요 (53) 한화오션의 노조 대응 문건 작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54)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강화 필요 **【산업안전보건 부문】** (1) 심야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택배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쿠팡에 대한 산재사고 전수조사 필요 (4) 쿠팡 재해 감소 방안 마련 필요 (5) 쿠팡 카플렉서 산재·고용보험 가입 방안 마련 필요 (6)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재해예방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8)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미흡에 따른 재발 방지 필요 (9)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사고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유형 결정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10) 학교 급식실 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동강도, 적정인원 등 실태 확인 필요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직업성 암의 유발요인으로 조리흄 포함 필요 (12) 학교 조리장 환기시설 현장점검 및 설치기준의 이행방안 마련 필요 (13)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 및 충실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 실시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14) 아리셀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실시 필요
(15)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지도점검 등 필요
(16)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7) 산재 신청 방해·은폐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 필요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 검토 필요
(19)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21) 하청근로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대책 강화 필요
(22) 산재보험 산재 승인 관련, 대법원 판례 존중한 전향적 방안 검토 필요
(23) 산업재해 원인 조사 대상 범위 확대 및 현행 위험성 평가 보완 방안 검토 필요
(24)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통계 생성 필요
(25) 산재보험TF를 통해 산재보험 처리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26) 산재병원 전문화 추진 필요
(27) 현업 고시 직종의 확대 계획 검토 필요
(28) 중대재해 예방 투자 실태 조사 필요
(29)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 마련 필요
(30)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 관련 국가 R&D 필요
(31) 안전관리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32) 안전보건교육 관련 불법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33)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재개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
(34) 과로사로 인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현장 감독의 의무화 등 필요
(35) 작업중지해제 결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필요
(36) 건강관리카드의 대상 발암물질 확대 등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37) 온열질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8) 현장실습생에 대한 취업 후의 보호 방안 검토 필요 (3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공공행정 현업 업무에 대한 적용 타당성 검토 필요 (40) 신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필요 (41) 중대재해 반복 발생 작업장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42) 산재승인 시 분류한 재해유형 변경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유형 결정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43) 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 운영 개선 필요 (44) 감정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필요 (45)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급여 현실화 필요 **【통합고용·청년고용 부문】**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관리·감독 강화 필요 (2) 공정한 채용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3) 취업 포털사이트와 알바 사이트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필요 (4)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필요 (5) 고령층의 재고용·계속고용 등 고용 전략 마련 필요 (6) 중소기업 중심의 정년 연장 논의 필요 (7) 가족돌봄휴가 장려를 위한 유급화 방안 검토 필요 (8)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9) 청년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10) 청년 고독사 및 고용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1)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 확대 필요 (1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13) 장애인 연계고용 확대 방향의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부적절

주요 감사 실시내용
(14) 단순 유통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시키는 업체에 대한 조치 필요 (15)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 (1)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제도로서 ADR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 조사관 증원 필요 (3) 권리구제 대리인제도 예산 확충 필요 (4)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허위자료 제재 필요 (5) 이행강제금 수납률 상향 방안 마련 필요 (6)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7)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판정을 위한 노력 필요 (8) 플랫폼 노동자의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9) 같은 사안에 대한 중노위와 노동청의 결정이 다른 문제 해결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 마련 필요 (2) 근로자위원에 이주노동자 포함 필요 (3)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마련 필요 (4) 위원장은 위원장 업무에 전념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1) 산재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2) 재심과정에서의 사회적 규범 등 고려 및 재심위원회의 인원 구성 개선 필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중대재해 반복 발생 작업장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2) 쿠팡풀필먼트 취업규칙 변경 심사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건에 대한 ‘위반 없음’ 결론에 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3) 유진기업에 산재 예방 유공 포상 경위 파악과 부당노동행위 재수사필요
(4)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사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필요
(2) 인천일보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진정 신속 처리 필요
(3) 한국 GM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한 지도 필요
(4) 한화시스템의 진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5)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부당 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
(6)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적정성 검토 필요
(2) 높은 임금체불 증가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 지도를 통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 필요
(4)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노하우를 타 지방청과 공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5) 한화오션의 노조대응문서 작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검토 필요 (6) 근로계약서 신고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7) 코스트코 산재 은폐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한전의 섬발전 관련 업무 회수로 인한 집단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2) 현대제철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후 부적절한 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3) 여수광양항만관리 화장실 문제에 대한 점검·지도 필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지시 불응 등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문제에 있어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공공기관 공통 ◀** (1) 기관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할 필요 (2) 징계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절 (3) 가족돌봄휴가 사용 활성화 필요 (4)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결과보고서 지적 사항 개선 필요 **▶ 근로복지공단 ◀** (1)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지원을 위한

주요 감사 실시내용
논의 필요 (2) 산재승인 시 분류한 재해유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업무의 적극적 수행 필요 (4) 공단의 산재 처리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5) 공단 개별 법률 제정 필요 (6) 공단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법을 회피한 사업장은 선정에서 배제됨을 명시할 필요 (7)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제도개선 필요 (8) 퇴직금 자산 적립 비율 제고 필요 (9) 산재병원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 (10) 외래 재활센터 추가 신설 필요 (11) 산재다빈도 기업 정보 공개 필요 (12) 산재 안내 관련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고객센터 외국인 상담서비스 확대 필요 (13) 장기간 산재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14) 요양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단축 승인 비율 증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공단 공식 작성 보고서의 내용 비공개 및 통계 오류 문제 개선 필요 (2)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적용 기준 확대 필요 등 (3)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5) 운영 중단된 안전체험교육장 조속한 재개 및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6)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등

주요 감사 실시내용
(7) 안전활동 수준평가 적용 대상 확대 필요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운영 개선 필요 (3) E-9비자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제도개선 필요 (4)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반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 공단의 예산 및 인력 증원 문제 해결 필요 (6) 사회복지사 시험장의 지역적 편중 해소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논의 필요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 대해 공적자금을 활용한 임금 보전 방안 연구 필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조치 필요 (2) 양질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3) 바이오산단 지정 지역에 대한 기술교육센터 구축 필요 (4) 폴리텍 설립 취지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5) 다문화청소년 지원 학교 추가 설립 필요 등 (6)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산업의학전문의 양성 확대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노사발전재단 ◀ (1) 전임 사무총장이 취업한 업체에 용역 수행 관련 자체 감사 및 재발 방지 필요 (2) 국제노동 협력과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법 위반 사항 조사 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1)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강화 필요

3) 기상청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필요 (2) 강수예보 정확도 개선 대책 필요 (3) 폭염 영향예보 옥외작업 제한시간 개선 필요 (4) 3개월 날씨 전망 표현방식 개선 필요 (5) 기상예보에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및 GPU 확보 필요 (6)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7)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필요 (8)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체계 개선 필요 (9) 지오테크 분야 기상산업 활성화 필요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예보인력 증원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필요 (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상시조직화 필요 (3) 기상청 조직 확대 필요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기상관측장비 지역별 편중 해소 방안 마련 (2) 관측지원선박 제도 개선 필요 (3) 슈퍼컴퓨터 리스 이자비용 절감방안 마련 필요 (4) 연구용 해양기상관측부이 관리 철저 【기상행정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제도 개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2) 기상감정업 관리 강화 필요 (3) 기상청 내부 감사 시스템 개선 필요 **【기타 사항】** (1) 기상박물관 편의성 개선 필요 (2) 지하 단층 R&D 예산 확보 필요 (3) 관측자료 품질관리 개선 방안 필요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문제에 있어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 필요 (4)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협상과정에서의 지도 역할 필요 (5) 성과 창출 필요 (6)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논의 필요 (7)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 필요 (8) 여성노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권고 이행을 위한 역할 필요 (9) 노무제공플랫폼 운영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 필요 (10) 운수업 노동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11)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12) 청년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 (13) 각급 위원회 과도한 성별 편중 개선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정책 퇴보문제 개선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d Contributions) 산업부문의 낮은 감축률, 배출권 거래제의 90% 무상할당, K-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전 문제, 화석연료 발전사가 녹색기업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는 등 탄소중립정책이 후퇴되고 있고, 4대강 보 재자연화 포기, 기후대응댐의 무리한 추진 등 물 분야 정책 또한 퇴보되고 있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포기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완화, 직매립 금지 준비 미흡 등 환경부가 산업에 종속된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직무유기 부처라는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환경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필요

▷ 제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자와 농어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1]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3) 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위탁사업 수행 주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인건비 횡령 사건에 대하여 환경부의 중징계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견책 등으로 경징계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도 무공해차 충전기 관련 부정 수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산하기관 수의계약 전수조사 필요

▷ 퇴직한 환경부 고위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재임하는 그린에너지개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환경부는 산하기관 수의계약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방지 대책을 보고할 것

(5)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산하기관 관리체계 점검 필요

▷ 퇴사한 국립생태원 내부직원이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환경영향평가 등급 하락에 이용하는 등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립생태원을 포함한 환경부 산하기관 관리체계를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전임 감사관의 도덕적 해이 관련 개선방안 요구

▷ 감사원 출신 전임 감사관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7) 용담댐 피해주민 보상의 시급한 해결 필요

▷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정 분쟁보다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조정 등 다각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

(8) 환경부 연구비 지원 사업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점검 필요

▷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업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성과 관리를 위해 부실의심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9) 수자원공사 외부 인사 채용에 관한 진상조사 필요

▷ 수자원공사는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부서장급(2급(갑)) 부장(센터장)직위를 신설하고, 신설된 직위에 특정 언론사 기자 등을 채용한 문제가 있으므로, 채용 과정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녹색전환 부문】

(1)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발생시키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통합허가의 적절성, 무방류시스템 점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설비개선과 오염 정화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녹색기업 지정제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녹색기업 지정에 필요한 신청 서류 과다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하므로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에서 폐수·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최근 5년간 98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

【자연보전 부문】

(1) 곰 사육 종식에 따른 사육곰 보호 방안 마련 및 민간협력 강화 필요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부터 민간 곰 사육이 금지되었으므로, 시행 유예기간 동안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육곰 보호시설 수용 용량 초과 개체 대응 등 사육

곰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물·가공품 거래 관련 사후관리 철저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출입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호랑이 가죽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상업용 가공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되는 등 등 단속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제주 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회부 필요

▷ 제주 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어 결과가 조건부 동의로 도출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해당 평가를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할 것

(4) 전북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필요

▷ 전북 완주 상관면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사업 허가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5)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등록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행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 이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짓 작성의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할 것

(6) 동물 체험의 예외 조항을 규정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적절성 검토 필요

▷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인 경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한 동물원수족관법[2] 시행령 제9조제2항의 법 취지 위배 여부 등 적절성을 검토할 것

(7) 생태자연도 1등급지 보전 대책 마련 필요

▷ 지리산 국립공원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벌목이 실시됨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되어 골프장, 케이블카 등이 건설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농림부 등과 협력하여 1등급지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8)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사업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은 어린이 환경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관에 내방하거나 교육받은 어린이 수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 사업에 대한 오해를 명확히 해소할 것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9)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사업 의혹 해명 필요

▷ 올해 개관한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 내에서 생태교육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예산이 당초 편성되어있지 않다가 특정 행사 이후에 추가로 예산 편성이 요청된 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8조에 근거하여 일시 사업인 경우에만 건축물 사용 승인이 가능하나 생태교육관 조성은 사실상 무기한 사용이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예산 편성 확정 및 국방부의 토지 사용 승인 이전에 민간인이 생태교육관 조성을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엄중한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

【자원순환 부문】

(1)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확대 및 정책 방향성 명확화 필요

▷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등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되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

▷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지자체나 민간의 판단에 맡기고,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여론조작을 포함하는 환경부 문건에 대한 작성경위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제주·세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일회용컵 감량, 회수 효과가 미비하고 매장과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재검토하고, 개인컵 할인 지원 확대 등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처리 과정이 복잡하므로,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유럽과 같이 일회용컵 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텀블러 사용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등 제도 참여율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이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회용컵의 원천적인 감량을 위하여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

(3)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피해 보상 방안 마련 필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일회용컵에 사용될 라벨지 생산 계약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들이 조폐공사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부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주 및 세종시에서 텀블러 사용 확대,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 등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억 원이 넘는 초기구축비용을 들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의 사실상 정책 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4)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지연으로 인한 감사원 고발 및 징계 필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인 고시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논의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마련 노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5) 멸균팩 재활용 용이성 표기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멸균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멸균팩 재활용률이 2%에 불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멸균팩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국내 제지산업의 조업중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골판지 제조, 건축자재 등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 현재까지도 종이팩 수거함 의무 설치 등 분리배출 체계가 없는 상황이고, '멸균팩 재활용 어려움' 표기의 직관성이 낮으므로, 내년

상반기 개편을 목표로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의 명확성 확보 등 분리배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

▷ 분리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일반쓰레기로 매립되는 쓰레기 비율이 연간 반입량 대비 35%에 달하고 있으므로, 분리수거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관된 분리수거 정책을 추진할 것

▷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수거 과정에서 분리된 품목별로 압축·압착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데 모아 압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

(6) 재활용 방법별 물량에 대한 통계 작성 필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활용 방법별 물량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환경부에서는 방법별 물량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EPR 제도의 질적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7)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반납의무 대상이 아닌 2021년 이전 보급된 폐배터리가 수출 말소되어 해외로 반출되는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으므로, 폐배터리 반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올바로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쓰레기 폐수 무단반

입 문제와 관련하여, 폐수 무단 반입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올바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전국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제도개선 등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중대 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슬러지 저류조의 환기시설 미비 및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및 내구성 있는 재질의 배관을 사용할 것'이라는 규정과 다른 스테인레스관의 청호스 교체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관련 시설 전수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

▷ 외부 음폐수 반입 내부고발 이후 노동조합원 11원의 고용 승계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 승계가 거부된 해고자의 복직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시설 운영 전문성이 없고, 중대 재해가 발생한 성우건설을 운영사에서 배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태영건설이나 다른 책임있는 기관으로 운영사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및 단속에 대한 점검 필요

▷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짜 종량제봉투에 대한 전국 단속 실적이 0건이므로,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10) 종이 빨대 관련 연구용역의 추진 및 정책 재검토 필요

▷ 2019년 환경부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를 발표하였으나 본 연구는 원료 취득 및 생산까지 발생되는 부하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여 폐기 과정은 생략된 문제가 있고, 2024년 3월 환경부가 발표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지구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는 해외 연구 사례를 취합한 것일 뿐 국내 생산 종이 빨대와는 관련이 없다는 등의 연구 용역 관련 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환경부는 종이 빨대에 대하여 정확한 국내 연구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일회용품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중지할 것

(11)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공모가 3차까지 무산되었고, 4차 공모 또한 부진한 상황이므로 환경부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12)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정책 시행을 앞두고 가동 가능한 제대로 된 신규 소각장이 없고 부지선정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타 지역 민간 소각장에 소각을 위탁하는 실정이 많은데 이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나 공공의 소각장 설치와 운영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

▷ 2026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직매립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

(13) 민간 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필요

▷ 직매립금지·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공공 소각장 대상 반입협력금 제도가 연말 시행되는데, 민간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 제도에 대한 환경부 시행령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에 민간소각장은 이번 연말이 아닌 2028년에 시행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일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통제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4) 팝업스토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 필요

▷ 팝업스토어로 인하여 단기간에 발생하는 대량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

(15)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준비 철저 필요

▷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이 2025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6) 시멘트의 6가크롬 함유량 관련 유해성 기준 마련 필요

▷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 문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해성 기준을 마련할 것

(17) 시멘트업계의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개선 필요

▷ 시멘트업계가 만든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이 그린워싱(Greenwashing, green+white washing :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을 하고 있다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8) 의류 재고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의류 재고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보고제도를 마련하고, 의류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며,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류 재고품의 소각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을 검토할 것

(19) 플라스틱 재질별 통계 구축 필요

▷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통계는 배출자 입장의 경우 PET병/기타, 재활용업체 입장의 경우 PET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HDPE, LDPE, PP 등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는 나누어져 있지 않으므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플라스틱 재질별 폐기물 배출과 재활용 통계를 구축할 것

(20)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필요

▷ 폐기물부담금 축소 신고 및 과소 부과 사례가 있고, 2024년 8월 현재 608개 업체, 42억원이 미납 중이며, 체납 업체 중 541개 업체(89%)가 상습 체납 중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청소차 운행 중 발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개발된 한국형 청소차 보급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야간·새벽 시간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선별분류 작업환경 개선 필요

▷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선별분류 노동자들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작업장 안전시설도 굉장히 미비하므로,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공공선별시설 운영기관에서 작업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화 캠페인 실시 필요

▷ 댐, 저수지, 하천 등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호우 전에 국민적 정화 캠페인을 실시할 것

(24) 방치폐기물 처리 지연과 부족한 비용 회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공제조합 방식의 점검 체계로 전환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25) PVC 포장재 사용 전면 금지 등 대책 마련 필요

▷ 제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PVC는 제조·사용 과정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킴에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PVC 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PVC 포장재 전면 사용금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물관리 부문】

(1) 기후위기 댐 건설 필요

▷ 이상기후 심화에 따라 가뭄 및 홍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주민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배제하고 기후대응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역에 예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후대응 댐의 담수 총량이 기존 댐과 비교해볼 때 양이 적어 수몰지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적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국토의 물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할 것

▷ 댐 건설 초기는 인근 지역 수몰 등으로 인한 반대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댐 건설은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

이므로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할 것

(2) 기후위기 댐 관련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댐 건설을 발표하였고,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며, 댐 건설이 홍수예방효과가 없으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환경부는 기후위기댐 대응 과정에서 수량 중심으로 정책이 기획되었고, 멸종위기 어종 보호 등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후위기댐 추진 과정에서 수량 뿐 아니라 수질과 생태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방안을 검토할 것

▷ 기후대응댐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이 없고, 참석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시공 담당 업체에 국토부 등 관련 공직자들이 퇴임 후 재직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생태 등을 고려하여 기후대응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

▷ 기후대응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구축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14개 댐별로 필요성·홍수예방 효과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물관리는 홍수위 조절 등 자연기반 해법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댐 건설 관련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실시할 것

▷ 댐 건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수몰되는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의 삶의 터전 유지를 위하여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

▷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부 실무진 회의만으로 기후위기 댐 건설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져 그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환경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선정 과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

(3) 보 및 댐 철거 방안 등 검토 필요

▷ 폐기는 서류상 폐기이고, 철거는 공사를 통한 실질적인 철거이므로 환경부의 답변 및 자료 제출시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보 철거 관련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며, 댐 철거 방안을 검토할 것

(4) 낙동강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

▷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부터 2018년 과불화화합물 수질사고까지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퇴적층 중금속 용출 우려 등을 조사하여 낙동강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녹조 독소의 유해성에 대한 공동조사 방안 마련 필요

▷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및 유해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가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녹조 독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논란을 종

식시키고 유해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학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녹조 제거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약 33억원을 투입하여 녹조제거의 효과가 미미한 녹조제거선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보다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철거하는 방식 등 녹조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보 개방을 통해 녹조 개선효과 및 수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세종보 상시적인 개방을 검토할 것

▷ 녹조관리 목표는 수질관리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물 사용 및 수자원관리 정책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게 재조정할 것

(7) 유역 중심의 통합적 물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집중호우가 내리면 특정 지점(댐)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만큼, 댐을 점, 하천과 지류를 선, 유역 전체를 면으로 보고 유역 중심의 통합적 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8) 새만금 지역 수질개선 대책 등 방안 마련 필요

▷ 2019년 이후 해수 유통을 하루 2번 진행하고 있음에도 퇴적토에서 용존산소 부족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관문 추가 증설, 조력발전 등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하여 조력 발전

등 해수 유통 방안을 검토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생태용지 관련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 이차전지 관련 현재 규정되어 있는 53개 항목 외에도 다른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만금 등 지역에서 이차전지 특화 폐수처리장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9) 이차전지 폐수처리 방류 기준 마련 필요

▷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새만금, 포항, 울산, 청주)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처리·방류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보이므로,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10) 조류독소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필요

▷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 독소에 대한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민-관 공동조사단을 꾸려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것

(11)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의 신속한 집행 필요

▷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재해복구비로 전용된 바 있으므로, 환경부는 조속히 취·양수시설을 개선할 것

(12) 석포제련소 이전 방안 검토 필요

▷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하는 오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석포제련소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13) 상수원보호구역에 떨어지는 오물 풍선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리 필요

▷ 북한에서 띄우는 오물 풍선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군 혹은 경찰과 협력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관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것

(14)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누수, 싱크홀 등의 문제가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누수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수관망 현대화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후 상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5) 콘크리트댐 노후화에 대한 하자보수 개선 제도 마련 필요

▷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과 정밀안전진단의 주기가 모두 10년이므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금이 투입되므로, 정기안전검사를 10년 이내에 실시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의 현행 10년 주기를 축소하는 등 하자보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16)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 홍보 필요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율은 6%에 불과하므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것

(17)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점검 강화 필요

▷ 2022년 기준 골프장 농약 검출률이 94.5%로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으나 점검 단속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유역청별로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18)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대구는 비점오염 저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예산이 삭감된 문제가 있으므로, 대도시의 비점오염 배출량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

(19) 군 부대 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군 부대 내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군부대 등과 협업을 통해 군인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

(20) 금강·영산강 보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 및 생태계 보존 중심의 물관리 정책 추진 필요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및 변경 공고가 급하게 처리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백제문화제 진행을 위한 공주보·세종보 담수화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생태계 보존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

(21) 하천점용허가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허가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불법 점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허가 관련 사전협의에 노력하는 등 하천점용허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2) 도산대교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

▷ 도산대교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편익시설이므로, 도산대교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기후 부문】

(1)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부 역할 확대 필요

▷ 열대야, 국지성 폭우 등으로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였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총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작성 및 기후 적응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위기감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위기는 아이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가장 크게 피해를 주므로, 2035년 NDC 목표 설정 시 또는 제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는 생활 물가와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과 상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상청의 기후변화상황지도에 농작물별 생육환경 변화 정보를 반영하는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고도화 할 것

(2) 면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필요

▷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초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시 주도적으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

▷ 2030 NDC 감축목표 설정 관련 기준배출량 산정 시 산림흡수량 포함에 대한 기준에 혼선이 있었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2035 NDC 감축목표 설정 시 이를 고려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30 NDC에서 설정한 40%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흡수원 및 탄소포집 기술이 불명확하고, 국제 감축량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과도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활용하여 감축 목표치를 설정할 것

(3) NDC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 지출액이 감소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후예산 관리체계 정립, 예산 확보 및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NDC 수송분야 관련 차량 배출량 기준 설정 조정 필요

▷ 2030년 차량 배출량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승용차 등은 기준이 완화된 반면, 그 외 차종은 기준이 강화되어 승용차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배출량 감축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특정 차종 사업 포기 또는 내연기관 차량 유지로 이어져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

(5)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공개 필요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수립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국회에 해당 내용을 상시적으로 공유할 것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필요

▷ 과학적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중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대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2030 NDC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캠퍼스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8)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 필요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 결과 발표 시 감축량과 함께 감축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와 달성률, 미달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제외되는 시설을 적용되는 시설로 포섭·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

(9)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필요

▷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67개국 중 64위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8%로 OECD 평균인 31%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낮아지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1.6%)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10)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배출권거래 시장 제도 개선 필요

▷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가격이 E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발전부문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국가가 배출권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안정화조치(MSR:Market Stability Reserve)제도를 도입할 것

▷ 2026년부터 EU에서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여, 국내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을 축소하고, 시설 가동 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환수범위를 확대할 것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4차 배출권 거래 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에너지전환 부문부터 더 많은 유상할당을 제시할 것

▷ 향후 1년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등 좀 더 큰 틀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거래제를 설계할 것

(11)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 필요

▷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년간 재정 투자액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확보할 것

▷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인 ‘공정한 전환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

▷ 취약계층의 보호·지원 그리고 기후적응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것

(12) 제철소 고로 개보수 작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필요

▷ 제철소의 노후 고로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고로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행 고로 신규 증설 시 수행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고로 개·보수 등의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는 2037년 이후 배출 예상량·감축 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4) 기후변화와 작물별 재배지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SSP5(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5 : 화석연료 의존 발전으로 가장 높은 온난화 경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1세기 말에는 사과·배 등의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각하므로, 탄소감축을 위해 적극적 목표설정과 현 정부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

대로 찾고,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변화 예측 정보를 넣어 농업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

(15) 2050 장기감축경로 마련 미래 전략 포럼 구성원에 청년, 노동자 등 포함 필요

▷ 기후헌법소원 후속 입법과 관련하여 '2050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미래전략포럼' 구성원으로 청년, 노동자 등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할 것

(16) 지구대기측정망 부실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에서 지구대기측정망의 부실 운영의 책임을 한국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으로 전가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정확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환경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보건 부문】

(1) 석면해체 현장에 대한 감리 부실 관련 제도개선 필요

▷ 2011년 이후에도 매년 800명 이상의 석면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석면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또는 일반주택 등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

▷ 작업계획서와 다른 감리결과보고서가 확인되는 등 석면 해체 부실 감리가 지속 반복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석면

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취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감리인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특수건강검진 수검 비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감리인들이 석면해체 작업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감리를 하고 있는 등 부실한 감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를 포함한 감리인의 현장 출입 및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료와 실제 정기점검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자료를 최신화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 포함 제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어린이용 장화 등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몰 유통 차단 여부 모니터링 등을 보다 철저히 실시할 것

(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사업 사후조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유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이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으므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사업과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사

업 통합 등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필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서류점검 방식이 한계가 있으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인력 증원, 관리권한의 지방이양, 화학물질 작업 경력 퇴직자의 현장점검 투입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강화 필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방식을 2021년부터 사업장 자체 서면점검으로 변경한 이후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직접 현장점검으로 방식을 변경하고, 5년마다 실시 중인 정기 현장점검 주기를 단축할 것

(6)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환경책임보험의 지속적인 요율 인하에 따른 총보험료 감소 시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과 같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담당 부처인 환경부가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7)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사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습기 피해자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국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

(8) 정유화학업체에 대한 특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대비 시스템 마련 필요

▷ 국내 대기업의 화학물질 법령 위반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학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유공장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9)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플라스틱 재료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기술 연구지원 및 산업 육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대기보전 부문】

(1) 노후 전기차 조기폐차 등 전기차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NDC 2030 전기차 420만 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없는 노후 전기차 조기폐차 등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전기차 구매보조 예산의 불용액을 고려하여 화재 위험에 대한 완속충전기 성능 보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 사업의 재검토 필요

▷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동차 업계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 공유, 통신 프로토콜 개발 등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수입완성차 업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급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신속히 협의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것

(3) 응축성 미세먼지의 배출량 산정 및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환경부는 현재 공식적인 미세먼지 배출량에 응축성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누락하고 있으므로, 미국·유럽 등의 국가등에서 표준모델을 통해 응축성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규제로드맵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4)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관리 방안 개선 필요

▷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다수의 역사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현행 방식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 지하철 역사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농도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및 입찰 비리 발생으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5)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 허위 측정 문제 개선 필요

▷ 화력발전소, 소각시설 및 시멘트 제조사 등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 시료채취 시간의 허위 작성, 시료채취 장비의 작동 문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전수조사하고, 측정기록 증빙 자료 의무제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지하철 소음관리 강화 필요

▷ 서울교통공사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285개 구간 중 절반에 가까운 118개 구간의 최고소음도가 80dB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청각손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철 객차 내 소음에 대한 적정 관리기준 수립계획을 마련할 것

(7)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수수료 산정 기준 및 검사 주체 재검토 필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수수료를 약 3만원씩 국민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은 과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확인검사 원가 및 수수료 산정 방식을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검사료를 책정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8) 조기폐차된 노후 경유차 재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보조금을 지급 받아 조기폐차된 노후 경유차가 폐차장에서 다시 해외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조기폐차 사업의 배출가스

저감이라는 본래 취지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재검토 및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시설 의무 설치와 관련하여,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과 동일한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가축분뇨의 공정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암모니아 배출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0) 지역별 매연저감장치 부착률 제고 방안 마련

▷ 4등급 이하 경유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 단속 여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 매연저감장치 부착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률을 제고할 것

(11) 요소수 에뮬레이터 유통·구입 금지 필요

▷ 화물차에 요소수 에뮬레이터(Adblue Emulator)를 장착하면 대기환경 오염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차량 성능도 훼손되므로 요소수 에뮬레이터 유통, 구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것

(12)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사업자 선정시 로밍 비용 고려 필요

▷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들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개별 카드를 사용

하여 이용자들이 타사 충전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충전기 공동사용(로밍) 비용의 격차를 낮출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자 평가시 로밍 비용을 고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3) 미등록·미인증 전기차 충전시설에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후 현장조사 주체는 환경공단임에도 용역업체에 위탁하였고,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가스열펌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관련 사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 예정인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 대한 제조사의 AS 및 저감장치 노후화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점검 전문업체에 위탁 필요

▷ 저감계획 미준수, 시설 관리·운영 미준수 등 전국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운영 관리 부실이 적발되고 있는데, 각 유역청별 소수의 인력이 이를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저감시설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체계 개선 및 여성 배려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 간부 공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여성 임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공석 발생 및 여성 배려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성과급 및 급여 지급 지침 준수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

▷ 국립생태원과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중징계 받은 직원 성과급 및 정직 처분 기간의 급여 지급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절차 등 문제점 개선 필요

▷ 2020년 8월 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과정에서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비율 문제, 이의제기 절차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PFOA에 대한 먹는 물 감시기준 강화 등 규제 방안 마련 필요

▷ 과불화화합물인 PFOA(과불화옥탄산)에 대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이 4ng/ℓ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감시기준은 현재 70ng/ℓ이므로, 국내 감시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2) 이차전지 폐수처리 항목·기준 재검토 및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신종 오염배출원 배출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리튬·코발트 등 미규제물질이나 알루미늄 등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물질들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규제물질 항목과 기준을 재검토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3) 미세플라스틱 측정 방법 고도화 예산 확보 필요

▷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정의,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 않아 각 나라별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2025년도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1) 야생동물 백색목록 지정 기준에 동물복지 기준 포함 필요

▷ 수입가능한 야생동물 백색목록 지정 평가 기준으로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만을 포함하고 동물복지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생동물 백색목록 지정 기준에 동물복지를 포함할 것

▶ 화학물질안전원 ◀

(1) 잔여 화학물질 보관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 필요

▷ 청리공단 소재 기업이 은행으로 인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화학물질을 그대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사고가 날뻔한 것을 경비가 막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잔여 화학물질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2) 화학사고 예방교육의 고도화 필요

▷ 화학물질안전 관련 법정교육이 업종별, 물질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고도화할 것

(3)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관리 강화 필요

▷ 현재 화학물질 불법 유통 온라인 감시단의 경우 자율 운영으로 인한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원 내 직접 모니터링 팀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게시물에 대한 강제적인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대상 확대 및 분석 방법 검토 필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들어오는 폐사체를 중심으로 포유류 6종만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 대상인 포유류 종을 확대하고 분변검사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마련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금호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진행 중지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검토 필요

▷ 금호강 하천환경정비 중 팔현습지에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종료 이후 12개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및 생태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도교 공사 취소가 어렵다면 공사 진행을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에 대해 별도 검토하여 의원실로 보고할 것

(2) 위법한 행위를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낸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보도자료 관련,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많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행업체가 실시한 거제남부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3) 허가 범위 이상의 대흥란 개체 채취에 대한 처리 필요

▷ 거제남부관광단지 내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채취·이식 과정에서 이식허가서에 제시된 23개체가 아닌 50촉을 채취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4)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필요

▷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5) 녹조예방 예산의 불용 원인 파악 및 예산 확보 필요

▷ 환경부의 녹조예방 예산이 해마다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대로 녹조발생 빈도와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녹조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6) 조류경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녹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녹조 조류경보제의 기준은 남조류 세포수만을 측정하고 있고, 조류 독소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울산 사연댐·희야댐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류경보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고 녹조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

(7) 낙동강 상류 지역에 녹조 대응 연구센터 설치 필요

▷ 녹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녹조 대응 연구센터를 설치할 것

(8)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인근 주민 건강대책 수립 및 주민 의견 수렴 필요

▷ 현행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칠서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 건강과 관련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합동 현지 조사,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1) 홍수관리 구역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한 개별 통지 방안 마련 필요

▷ 토지·주택 등의 소유자가 본인 재산이 홍수관리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신문광고 이외에 개별 통지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2)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한 공주보 담수 행위 금지 필요

▷ 공주 백제문화제에 배다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주보를 담수함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

(3) 양촌산업단지 화력공장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필요

▷ 충남 논산 양촌산업단지 화력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편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평가 과정에 실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왕피천 계곡 환경감시원 제도 재개를 위한 노력 필요

▷ 2024년부터 왕피천 계곡 환경감시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동 제도는 생태경관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동 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

(2) 하천·댐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 경북권역의 낙동강 하천 및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자체-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3) 대구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 노력 필요

▷ 대구 지하철 연평균 미세먼지의 농도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고농도 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

(4)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사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누출 사고에 대하여 검찰은 화학사고로 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사고로도 기록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으므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5) 낙동강 상류 축산단지의 국가 매입 필요

▷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낙동강 상류 지역의 주된 비점 오염원인 축산단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관리할 것

(6)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사후감독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인·허가하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한국수자원공사 ◀

(1) 기후대응댐 관련 수자원공사의 역할 수행 필요

▷ 14개 댐 건설 발표 관련 수자원공사 참여 계기, 절차 보고 요청 및 수자원공사의 지역댐 주민설명회 출장 관련 환경부와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 개별 댐 설치에 대하여 현재 가용 물 총량 등을 고려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기후대응댐으로 인해 발생할 쓰레기와 처리 비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후대응댐 설계단계부터 미리 고려하여 추진할 것

(2) 안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 확보 정책 추진 필요

▷ 기상변화 추세로 인한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3)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실효성에 대한 실증 필요

▷ 에코로봇의 본 목적인 수질 모니터링 기능 외에 실증 자료 없이 녹조 제거 기능 효과를 홍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녹조 제거 성능을 평가할 것

(4) 국제테마파크 용지 저가 매각 관련 고발 필요

▷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 원 이상에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3,256억 원에 매각하였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보고를 누락한 건 등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관련 직원을 고발할 것

(5)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오염 문제 및 부채 상환 근거 미비 해소 필요

▷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류 탱크로 인한 기름 유출과 다량의 다이옥신 검출에 대하여 토양오염 문제를 해소할 것

▷ 95억 원의 횡령 중 미회수 86억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향

후 준공과 부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며, 1조 원의 수익 예측이 적절한지 재산정할 것

▷ 사업의 근거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부채를 상환하려는 목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법적 문제를 해소할 것

▷ 제2의 에코델타시티사업 추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기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추진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6)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등 취수원 다변화 정책 필요

▷ 대구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관련 안동댐 지하 퇴적층 중금속 용출 우려를 해소할 것

(7) 식수 안전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보 필요

▷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정수장 39곳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정수장은 31% 정도이므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

(8) 통합적인 물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우수기에는 특정 지점인 댐만으로 관리가 어려운만큼, 현재 백석저수지(농어촌공사), 예천양수발전소(한수원) 등 분산되어있는 물관리 조직을 일원화할 것

(9) 하천 쓰레기에 대하여 공조 체제 유지 필요

▷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하천 쓰레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환경부 · 지방환경청 · 지자체와의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

(10) 조직 기강 확립 및 관리 노력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내부 횡령 사건 문제에 대하여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노력할 것

(11) 성비위 문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의 성비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병물 폐기량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재난대응,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병물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다량의 병물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병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

(13) 노후 풍력발전소 수리 대책 마련 필요

▷ 유휴지를 풍력발전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이 지나 10%의 이용률을 보이는 노후 풍력발전소 수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4) 청결지킴이의 철저한 안전교육 필요

▷ 청결지킴이는 연 2회 이상 안전 및 보안교육, 연 1회 이상 국유재산 담당자와 공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행률이 미흡하므로, 안전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지속적인 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청결지킴이는 댐 저수구역 및 유역에서의 환경오염행위 감시·수질오염 발생 신고 등을 위한 역할임

(15) 아라뱃길 운영의 시민 여가·친수 문화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아라뱃길과 관련하여 하천법, 항만법, 그린벨트 및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상황으로 인해 문화관광시설 도입 또는 민간의 관광레저 영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할 것

▷ 아라뱃길 자전거도로의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한강갑문에 안전을 강화한 순환형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김포 터미널 인근 유휴부지,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등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1순위 목표기능 중 하나가 물류·여객운송이었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므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아라뱃길 물류·여객운송 축소·폐지 및 하천 수질 개선 및 시민 여가·친수 문화 중심으로 전환’ 정책 권고를 이행할 것

(16) 댐 안전 우려 해소 필요

▷ 성덕댐, 영주댐 등에서 결로 및 균열이 생기고 있으므로, 댐 안전 우려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17) 안전사고 발생 관련 공사의 대책 마련 필요

▷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의 휴가 및 출장 일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자원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는 등 위험작업의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책임 규정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18) 개발이익과 민간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 필요

▷ 시화지구 개발사업에서 상업용지 과다 계획으로 인한 공실 발생 및 민간의 피해가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용지 배분 시 개발이익과 민간 피해 여부 등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

(19) 시화지구에서 추진된 사업에 대한 논의 및 검증 필요

▷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0년 동안 추진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검증을 실시할 것

(20)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투자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임명하고, 의안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회의시간이 평균 47분에 불과하는 등 투자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등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마련할 것

(21)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한 생태계 파괴 및 특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하여 생태계 파괴 및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세종보 재가동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종 시민과 소통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할 것

(22) 내수면어업권 회수에 따른 어민 생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안동호의 수은 농도가 허용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 내수면어업권을 회수함에 따라 어민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3) 인사특혜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이나 환경부 등 감사 청구 필요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조성공사 입찰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직원들의 승진 또는 연임 문제 및 특정 업체에 계약이 독

점되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환경부 등 감사를 청구할 것

▶ 한국환경공단 ◀

(1) 지구대기측정망 자료의 신뢰성 제고 필요 및 부정확한 측정값 발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강원도 고성 지구대기측정망의 빈번한 측정 장비 고장·가동중지로 인한 결측 및 관측값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농도로 계산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한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결할 것

(2) 폐배터리 회수율 제고 및 보관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폐배터리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폐배터리 회수 후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여 보관 장소에 방화 구획을 설정하는 등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운영하는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에 대한 통일된 안전성 확보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것

▷ 폐배터리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폐배터리 처리 및 민간 유통에 대한 기준 등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폐배터리 보관·운송·처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의류 재고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의류 재고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보고제도를 마련하고, 의류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며,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및 의류 재고품의 소각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의류가 아닌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류 등으로 우회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전기차 충전기의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협회를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보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가 허위로 보고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가측정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측정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공단 ◀

(1) 지리산 산악열차 개발 관련 입장 표명 필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지리산 산악열차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국립공원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2) 소나무재선충 방제 업무 이관 방안 검토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 근절을 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 업무 소관과 관련하여, 현재 선택적·화학적 방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생태적 관점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3) 산양 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후변화 및 ASF울타리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에만 1,058마리의 산양이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한바, 환경부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산양 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탐방객을 위한 국립공원 경관 조성 노력 필요

▷ 국립공원공단은 자연 보전뿐 아니라 탐방객 편의와 볼거리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볼거리나 그에 맞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5)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입도로 정비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국립공원공단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관리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립공원공단은 조직 규모에 비하여 산재 발생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원 내 CCTV 확대 설치와 중형급 이상의 드론 운영 확대방안,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 정규직과 공무직 간의 임금 차별 문제 해소 필요

▷ 국립공원공단의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공무직 간 발생한 임금 차별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한바, 권고 이행을 위한 급여를 즉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그린에너지개발과의 수의계약 문제 대책 마련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15년간 그린에너지개발과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체결 및 수도권매립지공사 출신 직원의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으로의 임명 문제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그린에너지개발과의 수의계약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경쟁입찰방식 또는 직접 운영 등 수의계약이 아닌 방식을 마련할 것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의 공정성 강화 및 부당이득 전수조사 필요

▷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

▷ 환경시설 견학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에 예산의 56%를 지원하는 등 독점 문제가 발생하였고, 견학 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여 책정하는 등 부당이득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기반사업부담금의 목적 외 사용 문제 해소 필요

▷ 기반사업부담금은 매립지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

적의 부담금임에도 수지차를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재무제표 정리 문제를 시정할 것

(4) 공사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다각화 등 방안 마련 필요

▷ 적자 증가에 대한 방안으로 대체 매립지 마련 및 추가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하여 자원순환종합공사로 전환할 것

▷ 공사 수익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해외 사업으로 확대하며,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등 명칭으로 개명할 것

(5) 침출수 처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업체 내정 의혹 해소 필요

▷ 침출수 처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입찰 설계 과정과 경과 및 최종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

(6) 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 조치 필요

▷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수시로 변경되어 용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용역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고용 및 노동조건 승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위해성 생활화학제품 유통 문제 시정 필요

▷ 2024년 8월 기준 화학 안전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 32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판매금지 조치 등 시급히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유통사 협의체 운영 결과를 제출할 것

(2)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친환경 허위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환경성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현장조사가 감소되고, 시료 제품 구매도 중단되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표지 인증 관련 예산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미용접착제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공업용 접착제가 미용접착제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음에도 해외 수출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속눈썹 접착제는 함유금지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속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R&D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녹조 제거를 위한 조류제거선 개발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문제가 있으므로, R&D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6) 비위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개인 비위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 및 국고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후속 조치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생태원 ◀

(1) 정보관리 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

▷ 퇴사한 내부직원이 자연환경종합 GIS(지리정보시스템) DB 내부자료를 유출하였음에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정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

(2) 고리도롱뇽 집단폐사 사건 관련 생태원의 역할 수행 필요

▷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의 탈출용 경사 설치 공사에서 고리도롱뇽 생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생태원의 환경조사 미흡 문제가 있으므로, 생태원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

(3)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 멸종위기 조류가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1) 업무추진비 허위보고 및 부정집행 시정 필요

▷ 경영본부장의 업무추진비 허위보고 사례 및 부정집행 관련 환경부 감사 후 징계·환수 절차를 진행할 것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 · 인사 · 재무 등 일반사항】

(1) 쿠팡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쿠팡CLS 근로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등에 따른 열악한 처우 등 근로조건 문제, 쿠팡 종사자의 야간 근로·과다근로에 따른 과로사 위험 등 산업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필요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으로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불이익한 환경이 조성된 사례가 있어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도가 부실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등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

(3) 기획재정부와의 상호 대등한 인사 교류 필요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간 인사교류 시 각각 부이사관을 상대

기관에 파견하기로 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에 국장을 파견하여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으로 보임되었음. 이는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예산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처 간 불균형적 인사교류 제도를 폐지할 것

(4) 민원인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폭언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민원인에 의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지원과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5) 실장 직위에 여성 임명 필요

▷ 3개의 실장 직위 중 여성 임용이 전무하므로 여성 실장 임용을 고려하여 인사행정에 반영할 것

(6)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예산 현실화 필요

▷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지원단가가 일인당 2,400원으로 지원수준이 매우 열악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의 급식비 등 제반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7)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포상 필요

▷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공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고용노동부 직원을 포상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것

(8) 고용노동부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분 필요

▷ 고용노동부 내 성희롱 사건이 적지 않고, 향응수수로 감봉 처분을 받은 상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지속했음에도 강등으로 처리된 사건 등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성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

(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인사 편중 문제 해결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에 인사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사는 고용노동정책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인사 편중 문제를 해결할 것

(10) 노동자의 시각을 고려한 업무 추진 필요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원하청 기업명을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하였음.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피의사실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음. 이와 같은 행태는 기업에 치우친 결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

(11) 한국폴리텍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조치 필요

▷ 한국폴리텍의 김건희 여사 채용 당시 경력에 대한 타당성과 재임용 기준 등에 대해 확인하여 조치할 것

▷ 한국폴리텍이 수사 중인 교수를 기획조정국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2) 같은 사안에 대한 중노위와 노동청의 결정이 다른 문제 해결 필요

▷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건에서 대전청 천안지청에서 현대제철 사건에서는 단체교섭 거부하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의 판정과 반대로 현대제철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은 최근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노동부 산하 소속기관들의 판단이 이렇게 정반대로 엇갈리는 것은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므로 제도보완을 검토할 것

【고용 부문】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속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설치 등 필요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조속히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간발표·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진척 상황을 국회와 논의할 것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모색 필요

▷ 단계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전환 정책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95%의 조사대상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처럼,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산업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공존 정책을 모색할 것

(3) 공정한 채용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필요

▷ 공정채용 담보를 위해 근로자 모집·채용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구체화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4)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된 예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사회적기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는데, 정부의 고용안전망 확대는 정책이나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해당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13기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2,361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되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동전환 수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과 협의하여 2036년 석탄발전소 폐지 전까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공무직근로자 고용연장 관련 기준 및 대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의 공무직근로자 고용연장은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노동, 정년, 재고용, 계속고용 등 다양한 의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무직근로자 고용연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준 또는 대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수시로 소통할 것

(7) 실업급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 필요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되, 이러한 정책기조로 인해 실업급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산재보험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8)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선원법상 특정 선박소유자(어선의 선박소유자 등 제외)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그런데 일부 선원이 해당 기간을 유급휴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모두 선원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대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선의의 비자발적 실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하므로,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9)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구별하여 부정수급을 감독할 필요

▷ 정부가 5년 동안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하면 3회차부터 감액하고 대기기간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수급 이유와 관계없이 횟수만 채워지면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반복수급하는 근로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구별하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감독할 것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필요

▷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액이 낮고, 수급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질적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 복지 등을 고려하여 공감, 포용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

(13)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등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외국인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검토할 것

▷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담당했던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 수행 인력 감소로 동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인력과 통역 서비스 등의 부족으로 지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센터가 많아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의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과 예산 증액을 검토할 것

(14)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신속한 이민청 설립 방안 마련 필요

▷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생활 환경, 정주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여 이민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

(15)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자로의 전환 방안 모색 필요

▷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문화 체득과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은 문화 및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 노동시장 적응이 수월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TF를 만들어 방안을 마련할 것

(16)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 개선 및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등

▷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비스 종료 후의 체류 여부, 근로시간에의 이동 시간 미포함, 일터 선택권 부족,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문제 되고 있으므로,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 개선 및 최저임금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행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할 것

(17)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뿌리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기간 확보가 중요해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 대비 20% 이상의 외국인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8)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미활용 업종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없었던 업종—특히 플랜트—이 실제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19)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 강화 필요

▷ 현재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동이 크고, 단기근로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20) 고용보험기금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고용보험기금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기금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충 필요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

【노동 부문】

(1)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수사 필요

▷ 쿠팡풀필먼트에서 직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퇴직자의 재입사를 제한하고 언론사를 추적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쿠팡풀필먼트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2) 쿠팡 클렌징 제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 쿠팡에서 실시하는 클렌징 제도(일정한 업무수행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는 과로사의 원인이 되고 파업 등 쟁의행위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것

(3) 쿠팡 취업규칙 변경 부실 심사 확인 및 조치 필요

▷ 쿠팡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관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심사를 태만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변경 부실 심사 의혹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할 것

(4)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필요

▷ 쿠팡 CLS에는 2022년에는 83건, 2023년에는 41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연도에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쿠팡CLS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5)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쿠팡의 취업규칙 중 연속 근무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초기화되는 규정은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불이익 변경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 규칙 변경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부실하게 관리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지속성, 반복성을 포함시키고 명확성의 원칙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구체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화할 것

▷ 직장내 괴롭힘 반복신고, 허위신고로 인해 근로감독관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여성, 30대, 중간관리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허위신고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근로자,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허위로 또는 사적 감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독립적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청년의 미취업 1순위 사유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선정되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도입 당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했으나, 현재는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병행할 수 있어 신뢰성이 저하되고 처벌이 미흡함.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의 정의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구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건완화 검토를 중단할 것

(7)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190호 협약 비준 등 필요

▷ 일터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하고 회원국에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ILO 190호 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대지급금 회수 절차 국세체납절차로의 전환 필요

▷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대지급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민사집행절차인 현행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포괄임금 오남용 규제 방안 마련 필요

▷ 포괄임금에 관한 근로감독이 저조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규제가 미비하므로, 법적 규제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10)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지침 개정 필요

▷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요건 강화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자 수, 발급 건수가 축소되고 있어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불임금확인서 지침을 개정할 것

(11)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체계 편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한 경쟁 강화만으로는 연금수익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체계 편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양대 노총, 경영자 단체 등이 포함된 공적인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방안을 마련할 것

(1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필요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예방,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장려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검토할 것

(13)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적립의무 불이행 방지 필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회사가 56,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는 1건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나는 등 사외적립금 적립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사용자의 퇴직연금 적립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4)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불법파견 실태조사 실시 필요

▷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으로 인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불법파견이 산업단지에 만연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근로감독을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15)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아리셀 참사에서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정규직 직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처럼 불법파견 노동자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줄어드는 추세임.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산업단지에서의 불법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6)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강구 필요

▷ 외국인노동자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불법파견에 대한 유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양성화 등 다양한 불법파견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17)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가 관련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절차 또는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

(18)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제노총(ITUC) 아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을 우려하며 현행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가 ILO 의장국으로서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은행의 콜센터 노동자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성 회피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수정할 것

▷ 2018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조항 관련 분쟁에서 한국의 노조법 일부 조항이 협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으므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검토할 것

▷ 조직 노동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조직노동자를 노동약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을 검토할 것

(19)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

▷ 콜센터 노동자들은 원하청 구조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콜센터 표준 노임단가 설계방안과 이를 포함한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콜

센터 용역업체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할 것

(20)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개선계획 및 전담부서 마련 필요

▷ 삼성전자가 PC에 부착된 웹캠을 통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정책을 이미 도입해서 운영 중이고, HD현대가 드론 · CCTV · 안면인식기를 통한 직원 감시,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명시하는 등 최근 다수의 기업에서 노동자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HD현대에서 자행된 직원 감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할 것

▷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기업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노동자 인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21) 각 지방청 및 지청 소속 권리구제지원 노무사 처우 현실화 필요

▷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 중에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1명도 채용하지 못하는 등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지역 노동자의 권리 구제 취약이 우려되는바,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서 처우를 현실화하여 공백으로 있는 권리구제팀 노무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

(2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실시할 것

(23)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의 다양한 구성 필요

▷ 민간위원 한 명이 2-3개 기구에 걸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최대 6개까지 참여하는 등 소수의 인원이 경사노위, 최저임금위, 노동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독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24)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 필요

▷ 2021년에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의 근로성과 관련해서 방송작가도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지도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도 현실은 그대로인바, 방송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25) 시정지시 관련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시정지시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범죄를 인지하지 않는 지방청 업무 행태를 파악·시정하고, 불법파견 현안 사업장 대책을 마련·보고하며,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에서 불법 파견이 확인됐을 때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는 시점이

진정·근로감독사건은 확인 즉시,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 기소 이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속한 시정지시로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방안을 보고할 것

(26)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 개혁 과제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의 다양화, 협의의제 발굴, 예산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27) 하이브-뉴진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고용의 형태가 아닌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고려한다면 직장 내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인권의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이브-뉴진스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계약서나 수익 등 외관으로만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고 직장내 괴롭힘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지시관계 등을 파악하여 하이브-뉴진스 관련 사안을 판단할 것

▷ 예술인, 연예인 등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근로형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이 발생한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

업 선정 과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하이브의 아티스트 인권침해 관련 한국NCP에 진정사건이 접수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한국NCP 당연직 위원으로서 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8) 근로감독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은 개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근로감독관의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들이 수사·단속 시 입은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많은 임금체불 사건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므로, 소액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직급 불균형 개선 등 인사상 유인책 강화, 소액임금 체불 사건의 간단·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동 행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과다한 업무량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것

(29)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

▷ 고용노동부의 퇴직자 중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근로감독관의 의원면직 비율이 높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감

독관의 업무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30)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위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과 함께 검토하여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31)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은 증가했음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32) 이음센터 예산 확대 전면 재검토 필요

▷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은 기존 노동상담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상담센터들은 지원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므로 이음센터 예산 확대를 전면 재검토 할 것

(33)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독려 필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제도 도입의 대상이 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은 1개에 불과하므로 고용노

동부는 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

(3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균형적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노동이사의 평균연령은 51.2세이고, 노동이사 중 20대와 30대는 없으며, 노동이사의 95%가 남성인바, 노동이사의 연령·성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균형적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하여 교육 및 직무 재배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고용노동부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가 과반수 노동조합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효한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실시할 것

(36)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7) 공무직근로자 및 자회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별도의 협의체 운영에 대하

여 반대하는 입장인데, 현재 공무직근로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38)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 고용노동통계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의 범위 내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

(39)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성과 홍보 필요

▷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지급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2024년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도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교섭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의 권리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홍보할 것

(40) 가맹점 사업주가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 마련 필요

▷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사업장 4,568개소 중 4,150개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 중 1,162개소가 가맹점이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 노동자의 근로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의 본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 근로기준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가맹점 사업주가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1)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등을 담은 지침 마련 필요

▷ 프리랜서로 일하는 웹툰 작가들은 마감에 쫓겨 무리한 작업을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프리랜서의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침을 마련할 것

(42) 업종별 근로시간 차등화 · 유연화 방안 검토 필요

▷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 개발사는 자율적인 근무환경이 창의성 발휘에 유용한데,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임. 특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규제를 업종별로 차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 필요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의 생활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44) IT · 게임 산업의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실시한 IT · 게임 산업 내 노동 실태조사 결과, 동 산업 근로자의 59.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이 중 27.5%만이 노동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포괄임금제를 근절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5) 근로감독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이랜드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이 10개월동안 진행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개별 사안별 특성으로 인해 근로감독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6)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이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업이 동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

영하고 있는지 관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47) 정부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참여 보장 필요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산업전환고용전문위원회 등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된 것을 비롯하여 정부 위원회에서 두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8) 가짜 3.3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받도록 하는 일명 가짜 3.3 행태에 기인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성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오분류된 노동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9)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올해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플랫폼 노동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50)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할 필요

▷ 2021년 기준 81만명의 노동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코스트코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와 같이 산재 은폐 의혹이나 노조 탄압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할 것

(51) 건설업 일자리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을 지도점검했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22년 이후 2건밖에 없음.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발언보다는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2) 원·하청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필요

▷ 한화오션이 원청과 하청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대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형식적인 것

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

(53) 한화오션의 노조 대응 문건 작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 한화오션이 노조 대응 문건을 작성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

(54)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강화 필요

▷ 임금을 체불한 가해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양형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산업안전보건 부문】

(1) 심야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쿠팡에서 연속적이고 고정된 심야노동으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심야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 등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

▷ 화물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택시기사, 제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업종의 야간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도입 및 야간근로시간 제한 등 과로사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확인하고, 도입 필

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밤샘 노동 과로사를 막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야간 노동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택배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택배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적인 작업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쿠팡에 대한 산재사고 전수조사 필요

▷ 쿠팡에 알려지지 않은 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쿠팡에 대한 산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4) 쿠팡 재해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택배업 등 유사직종과의 재해율 비교에 따라 쿠팡에 유의미하게 높은 재해율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제도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대형 사업장,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쿠팡의 재해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5) 쿠팡 카플렉서 산재·고용보험 가입 방안 마련 필요

▷ 쿠팡 카플렉서는 노무제공자인 퀵플렉서와 달리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이들은 퀵플렉서와 동일하게 택배업에 종사한다고 볼 것이므로 카플렉서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할 것

(6)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재해예방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고,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는 등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에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도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8)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미흡에 따른 재발 방지 필요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고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조사, 장비 사용정지, 건강진단, 특별점검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대응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재해 발생시 신속히 재해조사를 실시할 것

(9)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사고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유형 결정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공단이 재해유형 분류를 질병에서 사고로 변경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업무상재해 유형 결정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0) 학교 급식실 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동강도, 적정인원 등 실태 확인 필요

▷ 화상, 근골격계 질환, 절단, 낙상사고 등 다양한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직업성 암의 유발요인으로 조리흄 포함 필요

▷ 3년간 16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조리 종사자의 폐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 유발 요인에 조리흄을 포함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12) 학교 조리장 환기시설 현장점검 및 설치기준의 이행방안 마련 필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환기 지침을 마련하였음에도 환기시설 설치가 미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환기시설 설치 관련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환기시설 설치기준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13)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 및 충실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 실시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의 규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을 충실하게 실시할 것

(14) 아리셀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실시 필요

▷ 아리셀 검찰 공소장에서는 서류 조작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리셀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를 실시할 것

(15)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지도점검 등 필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강력한 지도 점검과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것

(16)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다수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는 등 위험성평가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하청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및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성 평가 미실시·부적정 실시에 대한 페널티 도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사업주 자율에 기반한 현행 위험성평가 제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전면 개편,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할 것

▷ 위험성평가가 우수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감면받은 보험료를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검토할 것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나, 현재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 등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험성평가를 자율에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처벌 조항 도입을 제시한 것처럼 위험성평가 미실시 처벌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17) 산재 신청 방해·은폐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쿠팡 대리점 측에서 故 정슬기 씨 유족을 회유하는 등 사측의 산재신청 방해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 방해·은폐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이 81% 집행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는 이를 사후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비용을 자기 이익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협력업체가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며, 이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협력업체가 사전지급을 받고 안전 관리에 더 많은 자금을 집행할수록 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19)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에 따라 이들의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1) 하청근로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대책 강화 필요

▷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분야에서 외국인 미성년 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안전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

(22) 산재보험 산재 승인 관련, 대법원 판례 존중한 전향적 방안 검토 필요

▷ 산재보험 산재 승인 관련, 의학적·과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여 전향적인 산재 승인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3) 산업재해 원인 조사 대상 범위 확대 및 현행 위험성 평가 보완 방안 검토 필요

▷ 2023년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후유증으로 영구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90일 이상의 지료를 요하는 중상해 재해는 15% 증가하였으므로 예방 목적의 통계 축적을 위해 재해 발생 원인 조사 대상 범위를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와 사고 원인 분석은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계획 및 대안을 마련할 것

(24)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통계 생성 필요

▷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통계 작성을 위해 활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통계는 데이터의 생산 목적도 다르고 상당기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기존의 보상통계 외에 재해발생 내용 등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예방용 통계를 생성하는 등 산재 예방 통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산재보험TF를 통해 산재보험 처리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산재보험 TF에서는 산재처리기간 단축, 근골격계 질환의 추정의 원칙 확대 등 노동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논의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26) 산재병원 전문화 추진 필요

▷ 현재 산재병원은 산재환자 점유율이 8.9%에 불과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산재환자가 응급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중부권 산재병원 중 1개에 대해 급성기 병원으로 전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7) 현업 고시 직종의 확대 계획 검토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부문에 대해서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업으로 일할 때는 적용 제외 없이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업 고시 적용 대상이 너무 협소하여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업 고시 직종의 확대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8) 중대재해 예방 투자 실태 조사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

(29)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 마련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컨설팅 등 형식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 법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기업이 실질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것

(30)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 관련 국가 R&D 필요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이 미비하고,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예방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연구와 관련한 법령, 예산, 조직을 마련할 것

(31) 안전관리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이에 매년 6,000여 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2,000여 명만 유입되고 있음. 또한, 안전관리자의 평균 연봉이 7,000여만 원으로 영세 사업장은 해당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32) 안전보건교육 관련 불법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안전 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위탁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들이 많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3)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재개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

▷ 경남, 경북, 충남에 위치한 안전체험교육장이 시설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중대재해사고의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의 시설을 개설하여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

(34) 과로사로 인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현장 감독의 의무화 등 필요

▷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로사로 인한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해당 사업의 근로시간, 기온 변화, 동료 직원 의견 청취 등 노동현장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실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현장 감독을 의무화하고,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기준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도 현장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것

(35) 작업중지해제 결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필요

▷ 한화오션의 작업중지해제 결정이 불승인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는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논의 자료에서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보여짐. 따라서 작업중지해제 결정 시 현장 점검과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한화오션 작업중지해제 결정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36) 건강관리카드의 대상 발암물질 확대 등 필요

▷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석면 등 15종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중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4종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다른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동 제도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37) 온열질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위반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온열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적은 상황이므로, 작업중지권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온열질환에 관한 정확한 산재 파악 방안을 마련하며, 온열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8) 현장실습생에 대한 취업 후의 보호 방안 검토 필요

▷ 19살 고교생이 반도체 공장에서 취업 1년 만에 간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해당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취업 후의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

(3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공공행정 현업 업무에 대한 적용 타당성 검토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및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제정으로 경비업 등 일부 직종에 대하여 공공행정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과학실무사, 도서관 사서, 수도검침 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고시 개정 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직종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것

(40) 신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필요

▷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리튬전지를 비롯한 신산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신산업이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

(41) 중대재해 반복 발생 작업장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근로감독관의 현장 감독 후에 5개월도 안 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으므로 관계자 처벌 뿐 아니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고려할 것

(42) 산재승인 시 분류한 재해유형 변경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유형 결정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공단의 재해유형 분류(업무상 질병)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재해유형 분류를 질병에서 사고로 변경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업무상재해 유형 결정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43) 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 운영 개선 필요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을 별도의 계약 없이 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왔으므로, 현행 법령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

(44) 감정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필요

▷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들의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원하청 구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정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45)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급여 현실화 필요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대부분의 직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므로,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휴업급여의 최저선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상향할 것

【통합고용·청년고용 부문】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지방청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없고 관련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등 구인·구직을 매개로 하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2) 공정한 채용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벌·스펙 중심 채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역량 중심 채용 기업을 발굴하여 장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것

(3) 취업 포털사이트와 알바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직 신청을 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례 등 과장된 구인광고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취업 포털사이트와 알바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정년연장, 정년폐지 및 재고용 등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고령층의 재고용·계속고용 등 고용 전략 마련 필요

▷ 고령층의 노동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60대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계속고용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고령층의 생애소득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취업에 따른 연금수급권 제약 등 직역별로 재고용·계속고용에 따른 소득 변화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60대 이상 고령자의 고용 전략을 마련할 것

▷ 여론조사 결과 계속고용을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

(6) 중소기업 중심의 정년 연장 논의 필요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 논의와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

(7) 가족돌봄휴가 장려를 위한 유급화 방안 검토 필요

▷ 가족돌봄휴가 장려를 위하여 동 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관련 출산급여 지원 정책의 설계·집행 등이 부실한 측면이 있어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출산급여 수준도 낮은 편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9) 청년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내국인 구인 노력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확대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 지역경제 소멸,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청년 내국인들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10) 청년 고독사 및 고용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제적 문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청년 고독사 및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 확대 필요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 900여 개 중 640여 개가 장

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더 많은 민간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고용 증가에 효과적이므로, 동 제도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 장애인 연계고용 확대 방향의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부적절

▷ 장애인 연계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지난 두 차례의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분리,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책무성, 책임성 약화 문제가 있으므로 재개정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4) 단순 유통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시키는 업체에 대한 조치 필요

▷ 일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이 단순히 유통만 하는 제품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로 인해 유통만 하는 업체가 부적절하게 구매실적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행태는 영세 장애인 고용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장애인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업체를 통해 구매한 금액 및 기업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5)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복지부 및 여가부의 경계선 지능인(IQ71~84)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

(1)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제도로서 ADR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ADR이 투쟁 중심이 아닌 노사 간의 합의와 조정 등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라는 성과를 내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

(2) 조사관 증원 필요

▷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 처우개선 및 증원,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

(3) 권리구제 대리인제도 예산 확충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구제 대리인제도가 대리인 선임 건수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허위자료 제재 필요

▷ 노동분쟁에 있어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를 벌금에 처하도록 한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 ‘스스로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자’ 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이행강제금 수납률 상향 방안 마련 필요

▷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면서 실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삭제되어 부당해고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고, 실제 이행강제금 도입 이후에 부당해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비하여 수납률이 낮은 바, 부당해고를 근절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 2024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건설현장에서 60여 명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7)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판정을 위한 노력 필요

▷ 현대제철 노조 간부가 무단결근하여 해고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모든 결근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단결근으로 인정하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라고 하면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판정을 위해 노력할 것

(8) 플랫폼 노동자의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조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플랫폼 노동자의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노동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9) 같은 사안에 대한 중노위와 노동청의 결정이 다른 문제 해결 필요

▷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건에서 대전청 천안지청에서 현대제철 사건에서는 단체교섭 거부하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의 판정과 반대로 현

대제철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은 최근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노동부 산하 소속기관들의 판단이 이렇게 정반대로 엇갈리는 것은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므로 제도보완을 검토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 마련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2) 근로자위원에 이주노동자 포함 필요

▷ 현재 근로자위원은 전부 노동조합 출신인바, 국내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수를 고려하여 이주노동자를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할 것

(3)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마련 필요

▷ 생계비, 경제성장률, 소득배분율,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이 감안되어 갈등 없이 원만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는 제도 마련 계획을 보고할 것

(4) 위원장은 위원장 업무에 전념 필요

▷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일·생활균형위원회 위원장 활동도 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제도 발전 연구와 건의 등 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고, 여러 위원회를 겸직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 다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타 위원회의 직을 그만두는 등 맡은 바 주어진 역할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1) 산재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2명에 불과한 정신의학과 위원의 수를 늘리고, 플랫폼 노동자 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상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재심과정에서의 사회적 규범 등 고려 및 재심위원회의 인원 구성 개선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 기각률이 높아지고, 법원의 판결로 재심 결정의 뒤집히는 사례가 많은 상황임. 재심과정에서 과학적·의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료계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재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중대재해 반복 발생 작업장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사망현장 CCTV조작과 유족을 합의 압박 등의 의혹이 있는 포스코이앤씨 천호동 현장 근로자 감전사망사고와 같이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나 업체 자율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

(2) 쿠팡풀필먼트 취업규칙 변경 심사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건에 대한 '위반 없음' 결론에 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 쿠팡풀필먼트의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심사와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퇴직금 미지급 진정 건에 대한 위반 없음 결론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므로 해당 심사 및 결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노동부의 행정 해석 재검토 및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여 보고할 것

(3) 유진기업에 산재 예방 유공 포상 경위 파악과 부당노동행위 재수사필요

▷ 근로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수사를 받고 있는 유진기업에 소속된 000부장에게 산재예방 석탑훈장 수여한 경위를 파악하고,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서울남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할 것

(4)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사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 필요

▷ 2023년 국정감사 이후 페르노리카코리아에서 발생한 6건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었음에도 기업은 인정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상황임.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노사 교섭을 재개하여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 지원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필요

▷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쿠팡풀필먼트 대표를 범죄자로 인지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2) 인천일보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진정 신속 처리 필요

▷ 인천일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229건의 진정이 있었고, 2024년 현재 2017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한 2022년도 8월 24일 제기된 진정이 아직 조사 중인바 해

당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처리할 것

(3) 한국 GM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한 지도 필요

▷ 한국 GM 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승소 확정받았음에도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

(4) 한화시스템의 진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친목단체인 근로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한화시스템의 임단협 구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이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

(5)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부당 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

▷ 2024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건설현장에서 60여 명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행정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해당 노동 사업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조속히 조치할 것

(6)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주)의 화재로 인한 공장 전소 후 한국니토옵

티칼에 고용승계를 요구한 노동자들과 해당 기업이 노사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적정성 검토 필요

▷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작업중지의 범위가 좁아진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작업중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한화오션 재해 현장에서 정확한 현장점검을 기반으로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것

▷ 통영지청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 출신 인사가 한화오션의 노동부 대응 자문위원으로 영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불합리한 작업중지 해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

▷ 한화오션의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에서 하청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향후 작업중지명령과 해제 과정에서 하청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것

▷ 한화오션의 작업중지명령을 특정 분야 작업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추락방지시설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추락방지시설 전수조사할 것

(2) 높은 임금체불 증가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경남 지역 임금체불 증가율(2024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이 전국 평균 20%의 두 배가 넘는 47.9%인 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3) 지도를 통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 필요

▷ 타 지방청에 비해 임금체불에 있어 지도 해결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바, 이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노하우를 타 지방청과 공유 필요

▷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에 있어 가장 우수한 상과를 내고 있는바, 해당 업무의 노하우를 타 지방청과 공유할 것

(5) 한화오션의 노조대응문서 작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검토 필요

▷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할 것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작성한 한화오션의 행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할 것

(6) 근로계약서 신고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울산의 한 옷가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0여 년에 걸쳐서 일하면

서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1.5시간에 월 평균 200만 원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현재 울산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7) 코스트코 산재 은폐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 2층 직원식당 조리실 식기세척기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되어 직원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측이 이를 지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코스트코에서 반복적으로 산재은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늦장 대응 문제를 개선할 것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주)의 화재로 인한 공장 전소 후 한국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를 요구한 노동자들과 해당 기업이 노사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한전의 섬발전 관련 업무 회수로 인한 집단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 최근 섬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전이 용역업체로부터 해당 업무를 회수하여 184명의 근로자가 집단 정리해고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바, 현장지도점검, 형사입건, 특별근로감독 등 관련 행정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것

(2) 현대제철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후 부적절한 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현대제철 순천공장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순천공장이 아닌 당진공장에 배치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여수광양항만관리 화장실 문제에 대한 점검·지도 필요

▷ 여수항만공사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의 경비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초소 근처에 화장실이 없고 있는 화장실도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노동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지시 불응 등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한 불응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246억원의 손해배상 제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문제에 있어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태안 화력발전소 1기·2기 폐지와 관련하여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TF에 참여하는 등 대전지방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공공기관 공통사항 ◀

(1) 기관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경영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C, D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징계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절

▷ 징계받은 직원에게 높은 내부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내부 규정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

(3) 가족돌봄휴가 사용 활성화 필요

▷ 일·가정 양립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므로 각 기관장들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유급화를 검토

할 것

(4)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결과보고서 지적 사항 개선 필요

▷ 시중노임단가 발표 시 계약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실제 필요하지만 4조3교대나 4조2교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복지 3종세트(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및 식비)와 연차휴가, 교육 경비 등이 제도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익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금을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 등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지원을 위한 논의 필요

▷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를 원활하게 개선할 방안을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아버지 태아산재 미지급이나 산재 식물인간 피해자 유족급여 미지급 등의 사례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보여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산재승인 시 분류한 재해유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공단의 재해유형 분류(업무상 질병)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상황을 방지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업무의 적극적 수행 필요

▷ 작년 국감 지적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개월간의 특정감사(11~12월) 결과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486건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매년 300여건에 불과하였고, 2024년 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특별관리 추진단이 10개월 동안 적발한 건수는 17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이 적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적발 건수 차이 발생 이유에 대해 보고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공단의 산재 처리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장기간의 산재 소송 및 산재처리 장기화는 피해노동자 및 그 가족에게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공단은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노동자에게 선보장 후 2·3심 판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재보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정의 원칙 적용을 검토할 것

▷ 업무상 재해는 의학적 인과관계 기준이 아닌 상당 인과관계, 즉 규범적 인과관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실제 법령과 판례의 법리이나 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산재소송에서 공단의 판정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번복되는 경우 이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공단의 산재 판정 기준을 법원 판례 기준으로 변경할 것

▷ 공단은 산재보험에 대해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야할 돈을 제대로 받아내도록 할 것

▷ 특별진찰제도는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현재 다수 신청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50인 미만 제조업 특별진찰 의무화 등 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도한 수준의 특별진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진찰을 진행했을 때 전문의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단계를 완화할 것

▷ 추정의 원칙 적용 사건의 경우 산재 승인률이 98%로 높은 반면, 적용 비율은 전체 사건의 4%로 매우 협소하므로, 추정의 원칙 적용 사건의 범위를 확대할 것

▷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 공단 개별 법률 제정 필요

▷ 공단은 방대한 기관 규모와 소관 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부설조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연을 확

장하기 위해 공단 개별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

(6) 공단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법을 회피한 사업장은 선정에서 배제됨을 명시할 필요

▷ 4대보험을 의도적으로 미가입한 기업이 공단의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상담 용역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입찰 공고에서는 '의도적인 4대보험 가입 의무 회피' 그리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은 선정에서 배제됨을 명시할 것

(7)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제도개선 필요

▷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 등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 퇴직금 자산 적립 비율 제고 필요

▷ 공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퇴직금 자산 적립 비율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사업 부문의 퇴직금 자산 미적립 실태를 심도 깊게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9) 산재병원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

▷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공단의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확대 추세이므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산재 환자들의 선택권과 접근성 향상, 지역 간 의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근로복

지공단 산재병원과 울산 산재병원 한의진료과를 확대 설치할 것

▷ 산재병원 장비의 내용연수 초과 보유율이 23년 기준 43.7%인바, 의료장비 노후화는 오진율 및 의료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적정 예산을 투입할 것

▷ 공단 소속 병원 11개 중 응급실이 없는 곳이 3곳,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5곳으로,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26년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산재병원 응급 인프라 구축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산재병원 의약품 공급 입찰 관련하여 적격심사는 업체의 납품 이행 능력 판단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행 능력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수수료만 받고 다른 사업체에 재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공단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

(10) 외래 재활센터 추가 신설 필요

▷ 산재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를 위한 외래 재활센터는 이용 만족도가 높고 직업 복귀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나, 현재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추가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1) 산재다빈도 기업 정보 공개 필요

▷ 공단이 산재다빈도 기업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대응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 하도록 한 정보공개법(제9조제7호 단서)에 위배되므로, 산재다빈도 기업 정보를 제공할 것

(12) 산재 안내 관련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고객센터 외국인 상담서비스 확대 필요

▷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50%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므로 산재보험 안내 관련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고객센터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것

(13) 장기간 산재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산재 소송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산재 인정률은 하락하고 있음에도 공단의 산재 소송 패소율은 증가하고 있음.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산재 인정에 있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산재를 인정하고,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를 우선 보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판정에 따라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요양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단축 승인 비율 증가

▷ 요양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단축 승인은 불충분한 치료로 질병 또는 부상의 재발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등을 통한 상

병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부당한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하여 결정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공단 공식 작성 보고서의 내용 비공개 및 통계 오류 문제 개선 필요

▷ 진단보고서 내용 중 공개 대상에 대한 비공개 문제 및 통계자료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 외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통계 오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적용 기준 확대 필요 등

▷ 석면 등 15종 물질 작업 환경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직업성 암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카드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직업성 암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적용 기준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건강관리카드제도는 도입된지 30년이 경과하였으나 변화된 산업 양상과 새로운 위험물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 물질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사업장뿐만 아니라 근

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을 높이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등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들의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원하청 구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정노동자보호 정책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구속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 관련 고용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운영 중단된 안전체험교육장 조속한 재개 및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전국 8개의 안전체험교육장 중 5개 교육장이 시설 노후화, 리모델링 등으로 운영 중단된 상태로 해당 교육장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허위 문서 발송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위탁교육기관이 있으므로 적정성 평가에서 순위가 낮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6)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등

▷ 스마트안전장비 사업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장비 인증 여부에 대해 실태 파악하여 보고하고,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디자인 관련 사업을 확대할 것

(7) 안전활동 수준평가 적용 대상 확대 필요 등

▷ 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시행하는 중앙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정부경영평가에의 반영비중이 100점 만점에 0.5점에 불과하고 지방공기업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므로, 지방공기업도 평가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경영평가에 산업안전 부분 배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공단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기존 용역업체에 재위탁을 한 경위 및 해당 업체의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운영 개선 필요

▷ 공단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콜센터 교육을 개설하는 사업주와 교육생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급 등 엄격한 훈련관리를 통해 교육생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것

(3) E-9비자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능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외국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 기관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대상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족보를 판매하는 브로커에 대하여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반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근로자 퇴직금 및 출국항공권 보조비 명목의 보험금)의 누적 미반환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확정된 미반환 보험금과 이자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5) 공단의 예산 및 인력 증원 문제 해결 필요

▷ 답안지 파쇄 사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인력과 예산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예산 및 인력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여 보고할 것

(6) 사회복지사 시험장의 지역적 편중 해소 필요

▷ 공단 시행 자격시험 중 응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사회복지사 시험의 시험장소가 서울, 경기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 충북, 경북, 전남, 세종은 1곳도 없는바 응시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시험장 추가 개설을 계획하여 보고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논의 필요

▷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의 고용소득과 기초생활연금 등 기타 지원소득의 지원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논의할 것

▷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률이 크므로 현재 부과하는 부담금 외에도 공공기관 평가에의 반영 등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부과를 검토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확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분리하고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책무성, 책임성을 약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직접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상향, 연계고용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 등의 정책을 검토할 것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IQ71~84)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 대해 공적자금을 활용한 임금 보전 방안 연구 필요

▷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에 위반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한 차별로 규정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장애인고용기금 등의 공적기금을 활용하여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조치 필요

▷ 한국폴리텍이 수사 중인 교수를 기획조정국장으로 임명한 것과 허위경력을 근거로 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원 임용은 부적절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양질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외국인 취업비자(E-9)의 필수교육 이수만으로는 외국인력의 충분한 취업 능력 배양이 어려우므로, 양질의 외국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폴리텍을 통한 기술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국에 직접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된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

(3) 바이오산단 지정 지역에 대한 기술교육센터 구축 필요

▷ 바이오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경북 북부의 안동·예천지역이 국가바이오산단으로 정식 지정된다면 바이오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하므로 기술교육센터 등을 구축하여 바이오 인력이 충분히 즉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4) 폴리텍 설립 취지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 경상비 감액으로 인한 다솜고 운영 어려움, 물가 대비 낮은 급식비 단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공공훈련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 거시적인 국가 고용정책의 틀 안에서 방향성을 잡고 정책을 설계할 것

(5) 다문화청소년 지원 학교 추가 설립 필요 등

▷ 폴리텍대학 산하로 충북 제천에 있는 다솜고등학교(다문화청소년

지원)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비율이 높은 안산시에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어린 나이에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기본권이나 노동인권감수성 과목을 확대하여 운영할 것

(6)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칭이고, '그냥 쉬었다' 는 구직 단념 청년이 많은 상황이므로, 한국폴리텍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산업의학전문의 양성 확대 필요

▷ 산업의학 전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의학전문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산업의학과 신설 등을 통해 산업의학전문의 양성을 확대할 것

▶ 노사발전재단 ◀

(1) 전임 사무총장이 취업한 업체에 용역 수행 관련 자체 감사 및 재발 방지 필요

▷ 전임 사무총장이 재직 시절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용역사업 수행을 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체 감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2) 국제노동 협력과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외국의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 분야의 충분한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므로, 노동부나 유관기관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노사발전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법 위반 사항 조사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물류센터 투자상품 인마크 28호 투자는 높은 공실률, 실정법을 위반한 운용사에 투자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바, 기존의 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 위반이 없는지 조사하여 보고하고, 일용직 건설노동자 등의 퇴직금 운용을 신중하게 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사회적기업은 인구소멸지역 등 농어촌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영리기업과는 달리 대다수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있는바,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전액 삭감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사회적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1)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 강화 필요

▷ 청소년들이 자기의 노동 관련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을 강화할 것

3) 기상청 소관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필요

▷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폭우 시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

(2) 강수예보 정확도 개선 대책 필요

▷ 강수예보 정확도를 판단하는 세 가지 지표의 향상이 전반적으로 더딘 상황이므로 강수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폭염 영향예보 옥외작업 제한시간 개선 필요

▷ 폭염 영향예보의 위험수준별 대응요령에 있는 산업 분야 작업 제한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산업 분야에 대한 옥외작업 제한시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

(4) 3개월 날씨 전망 표현방식 개선 필요

▷ 3개월 날씨 전망의 확률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표현방식을 개선할 것

(5) 기상예보에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및 GPU 확보 필요

▷ 향후 기상예보에서 AI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AI 학습용 데이터 축적, GPU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6)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은 가뭄정보 예측에 일조량, 증발량 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부실하므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개 부처에 운영되고 있는 가뭄정보 관련 시스템들의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7)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필요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가 유럽·영국 등 외국 모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체계 개선 필요

▷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시 기상청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9) 지오테크 분야 기상산업 활성화 필요

▷ 기후테크 분야 중 지오테크 분야에서 국내 기상산업이 취약하므로, 기상청이 전담하여 발전시킬 방안을 검토할 것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예보인력 증원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이상기후로 인한 호우특보,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예보정확도 및 예보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보관 1개조 충원 등 예보인력 증원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

▷ 기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후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예보관을 확충하고, 예보관의 지자체 현장 파견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위기 시대에 장기예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므로, 장기예보 인력 확보, 1년 이상 장기전망 등 장기예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상시조직화 필요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상설화, 연구인력 확보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3) 기상청 조직 확대 필요

▷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모델 개선, 관측장비 확충, 예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상환경부 등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북지역의 면적, 기상현상 및 재난, 서비스 격차 등을 고려하여 안동기상대를 기상지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기상관측장비 지역별 편중 해소 방안 마련

▷ 예보정확도 높이기 위해서는 관측품질이 중요하나 수도권과 지방의 관측 조밀도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상관측장비의 지역별 편중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2) 관측지원선박 제도 개선 필요

▷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기상정보가 중요하므로, 관측지원선박 확보, 관측자료 수신율 향상 등 관측지원선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슈퍼컴퓨터 리스 이자비용 절감방안 마련 필요

▷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한 리스 수수료만 104억 정도에 달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연구용 해양기상관측부이 관리 철저

▷ 연구용 해양기상관측부이의 설치 지연 등으로 해양 예·특보 업무 지원에 차질 없도록 기상관측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기상행정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제도 개선 필요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이 낮아 90%에 가까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상감정업 관리 강화 필요

▷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에서 기상감정업을 등록하지 않고 기상감정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등 관리를 강화할 것

(3) 기상청 내부 감사 시스템 개선 필요

▷ 기상청 내부신고 조사·처리 결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상청 내부 감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기타 사항】

(1) 기상박물관 편의성 개선 필요

▷ 기상박물관의 안내 표식, 보행자 전용도로, 경사로 안전조치 등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지하 단층 R&D 예산 확보 필요

▷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하 단층 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할 것

(3) 관측자료 품질관리 개선 방안 필요

▷ 가덕도 풍향 관측자료 오류와 같은 문제로 인해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측자료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사용자 및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체성이 반영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문제에 있어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지역경제와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재부 · 산업부 · 노동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 국내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전환과 그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 필요

▷ 지역의 노동 정책, 노사 문제 또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계하여 지원할 것

(4)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협상과정에서의 지도 역할 필요

▷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위원회에서 타임오프 협상에 있어 국민기여, 공무원 처우개선 등도 고려해 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5) 성과 창출 필요

▷ 사측과 민주노총 · 한국노총 사이에서 타협 · 중재의 역할을 더 능수능란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충분한 성과를 창출할 것

(6)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논의 필요

▷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단계적 · 점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할 것

(7)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 필요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바, 다양성이나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포함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여성노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권고 이행을 위한 역할 필요

▷ 노사관계에서 여성대표성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여성노동 집중 업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 가사노동자 관련한 ILO 189호 협약을 비준 논의 필요, 성평등 임금공시제 적극 시행 등의 논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여성노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권고'의 진전을 위한 법률개정 과정에서 노사정에 설명·설득할 것

(9) 노무제공플랫폼 운영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 필요

▷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제공플랫폼의 알고리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등 근로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국회, 정부, 플랫폼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10) 운수업 노동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고속버스 등 운수업의 노동 수급이 심각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운수업의 노동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1)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필요

▷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 관련 의제를 포함하여 논의할 것

(12) 청년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

▷ 현 정권에서 활동이 중단된 청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정책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할 것

(13) 각급 위원회 과도한 성별 편중 개선

▷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각급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과도한 성별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